

‘통합열차’ 속도 내니 ‘분당열차’ 출발…복잡해진 정계 개편

여야 ‘신 4당 체제’로 가나
국민·바른 의원들 탈당 땀
오히려 의석수 감소할 수도
6월 지방선거 거쳐야 판가름

국회 제 3당인 국민의당이 분당의 갈림길에 섰다. 호남의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반대파가 개혁신당 창당 검토를 선언하면서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정당에 합류하는 ‘3당체제’보다는 ‘4당 체제’ 재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통합의 다른 축인 바른정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탈당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지며 국회 지형을 뒤흔드는 새판짜기가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재편의 위력과 지속성은 일단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야 확실히 판가름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그 힘을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안정적인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원내 과반 확보가 절실한 여당과, 총선과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보수 통합에 명운을 걸어야 하는 한국당이 또 다른 세력 균형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4당 체제가 출범한다고 해도 그 수명이 얼마나 존속할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 정계개편의 진원지인 국민의당 통합파와 통합반대파는 4일 분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앞서 이른바 박지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 11명은 전날인 3일 저녁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강행할 경우 ‘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안 대표측이 통합을 추진한다면) 확실하게 갈라설 것”이라고 못박았고, 최경환 의원 역시 “풍찬노숙을 하더라도 보수 야합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 통합반대파인 김경진 의원은 통화에서 “끝까지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반면 통합파는 통합 절차를 밟아나가며 개혁신당은 불가능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바른정당과 통합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연주 의원은 라디오에 나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신당을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면서 “다른 당을 만들 수 있겠지만 교섭단체가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신당 출범 가능성 자체를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 통합 상대인 바른정당의 내부 분열도 정계개편의 또다른 변수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세연 의원 등 일부가 탈당 의사를 사실상으로 굳힌 것으로 전해진 탓이다. 현재까지는 김 의원과 이학재 의원, 남 지사 정도가 한국당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앞으로 국민의당과 통합 과정에서 정세성 논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추가 탈당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바른정당에서도 이탈이 생긴 가운데 양측 통합이 이뤄지면 숫자상으로는 기존 국민의당 의석(39석)보다 줄어든 마이너스 통합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바른정당 의원 5명이 한국당으로 넘어갈 경우 한국당 의석수가 121석 이상으로 늘어나 원내 1당인 민주당과 의석수가 같게 되고, 6명 이상이면 원내1당이 바뀌게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창당 진행 중 창당대회 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새총득별사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지만 곳곳에 빈자리가 많아 쓸려간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햇볕정책’ 정강정책 반영 논란

국민의당-바른정당 강령 통합 토론회서 신경전

공식 통합 절차에 돌입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4일 통합정당의 정강·정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여 주목된다. 바른정당 측에서는 햇볕정책을 굳이 강령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햇볕정책’을 건드리지는 안 된다’고 반발, 통합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당의 정강·정책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양당의 정강·

정책이 유사하다며 통합정당이 표방할 가치와 강령 등을 정하는 과정에 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햇볕정책’을 강령에 명시하느냐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은 발제에서 “햇볕정책의 선한 의도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그 정신은 평가하되 현실정책으로서 가능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바른정당의 원외위원장도 “햇볕정책은 이론은 뛰어나지만, 현실 적용에서는 실패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유승민 대표 등 바른정당은 햇볕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

이에 국민의당 참석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동섭 의원은 “햇볕정책이라고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연상하게 된다”며 “햇볕정책을 건드리면 (선거에서) 수도 권도 전멸한다”고 반박했다. 신용현 의원도 “햇볕정책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면이 있다”면서 “오히려 이후의 정부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연주 의원은 “지금 국민의당 강령에도 햇볕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햇볕정책의 정신인 대북포용 기조가 깔린 것”이라며 “백해무익한 논쟁”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 진영에서는 “햇볕정책 포기, 보수 야합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는 등 햇볕정책의 강령 반영을 두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위안부 합의 죄송”

피해자 할머니들 청와대 초청 의전차량 등 최고 예우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인사말에서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방으로 나라를 찾

았으면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고, 한도 풀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오히려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 만찬 때 초대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 위안부 피해자 8명이 이날 오찬에 초청됐으며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임원중인 김복동 할머니를 찾아가 병문안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이날 오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대통령께서 한일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주어 가슴이 후련하고 고맙습니다. 그날 평평 울었다”고 말했으며 이옥선

할머니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사죄만 받게 해 달라. 대통령과 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와대 방문에 최상의 예우를 갖췄다. ‘나눔의 집’에서 출발한 할머니들은 비서실에서 제공한 의전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까지 경찰의 에스코트 아래 국빈 이동시와 같은 예우를 받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 2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사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건 지난해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5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0분(1시간 20분) 동안 회견을 갖고, 초반 20분 신년사 발표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1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 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송빌딩
Tel. (062) 382-8879

분양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